

##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비한 인구정책



趙南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최근 우리 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예상외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수로 표시되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1990년대에 들어 1.5~1.7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1.48명, 그리고 1999년에는 1.42명으로 선진국의 평균수준보다 낮아지고 있다.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출산율 감소속도가 과거 어느 저출산 선진국가에 비해 아주 빨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현재 저출산 국가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특히, 이들은 경제적 약자로서 그리고 만성질환 등의 비율이 높아 연금 및 의료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노동력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사회복지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경제 문제는 출산 증가로 인해 해결될 수 있으나,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의식 내지 가치관 즉, 소자녀관 및 결혼관 등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특정한 정책에 의해 변화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인구변동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제반 부문별 환경과 상호관련을



**저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인구정책의 내용을 기존의 각 부문별 관련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맺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결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출산율 감소현상에 대한 대응은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보건 및 복지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제반 사회경제정책과 통합, 균형을 이루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크게 인구변동요인에 영향을 미쳐 현재 출산수준을 바람직한 수준으로까지 회복시키거나 적어도 현 출산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저출산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과거 인구억제정책 시기에서와 같이 정부에 의한 간섭위주의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따라서 자녀를 두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최상복지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교육, 홍보하여 저출산 또는 독신과 무자녀에 대한 선호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안으로 여성의 취업과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병행가능성을 제고시켜 적정한 수준의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저출산국가와 일본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으로 적어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중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병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부양의무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여성의 취업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차별을 철폐,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전술한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병행 가능성 제고를 그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정년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예견되는 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의 부족문제를 완화하여 결국 노동력 세대와의 통합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96년 인구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의 제고를 중심으로 한 신인구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의 기본 내용은 적정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그리고 여성복지와 가족복지 등의 제고이다. 환언하면, 신인구정책은 보건 및 복지정책수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통합접근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인구정책의 내용을 기존의 각 부문별 관련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